"전북 현안법안 국회 통과 총동원"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 열고 대응 철저 주문

"총력대응 해달라" 국가예산 확보 중요성 강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난달 29일 간부회의에서 전북의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와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부서를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이행, 농업 가뭄 대책 추진상황, 초·중·고 학교급식 식재료비 상승에 따른 추진대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추진, 여름철 하천 불법 점용 행위 점검, 소방서 공감소통관 제도 추진 등 현안에 대해 중점 토의가 이뤄졌다.

그 외에도 실국별 중요 협력사항과 더불어 도내 여러 단체의 목소리 반영 등 현장행정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를 통한 전북도 현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원, 중앙공모사업 총력 대응, 국가예산확보 중요성 강조, 전북도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기업과 수시 소통, 사후관리 점검 및 대책 강구 등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특히, 전북도 현안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회 법안별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논리 보완과 관계부처 및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병행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과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 제정에 목표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과 적극 협조해서 특별법안 마련 및 발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됐다며 격려하는 한편, 각 실국이 전략적으로 협업하며 중앙공모사업 선정 등 주요한 과제를 이뤄내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2주간 기재부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중요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규모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각 실국에서는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투자협약 체결 이후 진행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기업과의 상시적 소통과 애로사항 적시 해결 등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북도 현안법안 통과대응 철저, 중앙공모사업 대응, 국가예산 확보 총력대응,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점검·대책과 수시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전북 발전에 여야 따로 없다"

김관영 도지사, 국힘 추천 박성태 도 정책보좌관 임용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29일 협치의 장을 열기 위해 국민의 힘의 추천을 받았다던 3급 정책보좌관 자리에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은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인 '협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보좌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는 이번 정책보좌관 임명을 통해 국민의 힘과 협치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 힘에서도 도정 주요 현안과 전북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현안 해결 능력이 탄탄한 박성태 운영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보좌관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정치권과의 협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임용장 수여를 통해 "민선 8기는 혁신경제와 민생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임기 내 정치, 교육, 행정 협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권, 교육청, 시군과의 건강한 동행을 통해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도 교육청,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하여 행정과 교육의 협력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국가예산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의 상생발전과 현안 해결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다.

/김경수 기자

민주 당권주자들의 정치 교체 비전

이재명 "혁신"·박용진 "약속"·강훈식 "통합"

민주,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 공개토론회 열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에서 이재명(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박용진, 강훈식 후보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지난달 29일 공개토론회에서 정치 교체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주최 당대표 공개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인 양당 독점 체제 때문에 국민들께선 최선,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다는 자괴감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국민께서도 차악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의 당대표 후보 저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박용진의 민주당 5대 혁신안의 맨 첫 번째가 '약속정당'이다. 정치 교체를 향한 민주당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겠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양극화 극복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등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정부 여당에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 방지법·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까지 모든 정치인이 노력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온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 개혁에 우리가 앞장서자"며 "민주당의 쇄신, 이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가늠좌가 바로 약속정당"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후보는 "정치 개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국민 통합과 반대로 흘러간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타협 없는 대결 정치, 지역주의는 더 공고해졌고 진보란 것은 다양성을 얼마나 갖느냐 경쟁인데 다양성이 매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 개혁이어야 한다. 민주당부터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우리 당이 선명야당, 대안야당으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법제화의 원칙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을 진행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경험한 전당대회 예비경선 중 이번처럼 흥행에 성공한 예비경선은 처음"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고 단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부심, 정책 비전으로 활력있는 축제장을 만들어서 '혁신됐다, 믿고 함께할 정당'이라고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레이스에 임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尹 지지율 28%… 취임 첫 20%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전주보다 4% 하락, 부정평가 62%

정당 지지도로 민주·국힘, 36%로 '동률'… 무당층 23%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4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였다.

7월3주차 조사 때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59%), 성향 보수층(51%), 70대 이상(4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성향 진보층(87%), 40대(78%)에서 두드러졌다.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40%, 부정 47%를 기록하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6%), 경제·민생(6%), 전 정권 극복(6%), 소통(5%), 인사(4%), 결단력·추진력(4%), 외교(3%)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인사(21%), 자질부족·무능(8%), 독단적(8%), 민생 살피지 않음(8%), 소통 미흡(6%), 경찰국 신설(4%), 여당 내부 갈등 및 문자 메시지 노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6%, 무당층 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 RDD 10% 포함)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9005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1.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익산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1조8509억원 확정

익산시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8,509억원을 확정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시민 생활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심의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10억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원 등의 사업비를 확정했다.

또 현안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에 맞춰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했다.

한동연 부의장은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며 "집행부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저학력·저소득층 국힘 지지? 국민 갈라치기"

민주 박용진 의원, 이재명 의원 발언 비판

"노골적 선민의식, 정치성향 따른 갈라치기"

"중산층·서민의 정당 김대중 정신" 강조

"부자 돈 보태기 아닌 사회에 더 기여 이끌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후보의 '저학력·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 발언에 대해 "저학력, 저소득층은 언론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97세대 소장파 주자인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분열의 정치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할 길은 국민통합의 길이다. 안타까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성향에 저학력과 저소득을 굳이 끌어오는 부분에서 상대방 지지층을 얕잡아 보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힐난했다.

이어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내면인식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학력, 고소득, 부자라는 선민의식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론조사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박용진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DJ의 정신이 민주당에 살아 숨 쉬게 할 것"이라며 "상대방을 지지한다고 해서 저학력, 저소득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정치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 또한 지켜낼 것이다. 이것은 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더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박용진은 부자에게 돈 더 보태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부자가 사회에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정강정책 '우클릭'을 시사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고,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 정강정책의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보적이되 대중정당으로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부자를 배제하는 느낌이 안 드는 뭔가를 찾아야 할 것 같긴 하다"고 했다.

/뉴시스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달 29일 개회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창군민의 동의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